

경찰 내부통제의 시대적 변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Periodic Change of Police Internal Control

이 상 열(Lee, SangYeol)*

ABSTRACT

1945 police constitution since then police organization corruption exposing and ethical ceremony cultivation and integrity from above mass produced a various countermeasure raising with the fact that, cannot be effective extra ordinary evaluation is receiving.

The police organization cannot be trusted the citizens without being able there is a various reason but is biggest and this new is in order for the integrity to be low.

Finally the integrity is low the thing is a possibility of saying that originates to the insufficiency of police internal control,

Namely, the control middle which is the possibility discipline of doing the conduct self-control of the police officer the internal control is feeble and police officer each person voluntary and acts with egoistic and even at the time of character does not display a regulation power well.

The internal efforts for police corruption control flowing, corruption control are big, the degree substitution the huge result the self-purification will of the police officers and forms the corruption control atmosphere of police organization leading which is not and calls there was an effect.

Key Words : 부패척결(Corruption Exposing), 청렴도(Integrity), 윤리 의식 함양(Ethical Ceremony Cultivation),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자정 의지(Self-Purification Will)

1. 서론

경찰은 제복을 착용하고 국민과 직접 대하는 ‘움직이는 정부’로서 상징성을 지니고, 대부분의 경찰작용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경찰청, 2010: 422).

경찰활동이란 항상 도덕적으로 위험한 직업이다. 경찰관 직무의 본래적 특징은 그 지위와 직책이 부여하는 권한행사와 직결되어 있기에 경찰활동은 항상 도덕적으로 위

* 한국복지사이버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행정학박사

협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일반조직의 업무와는 달리 경찰조직의 업무는 경찰관이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할 때도 있고, 또 위험한 많은 사건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찰관들이 정부활동의 최일선에서 국민에게 직접 명령, 강제하는 권력작용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때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는 일반 국민에게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이상수, 2010: 164).

한편 강력한 경찰의 사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09년의 징계건수는 1천 169건에 달해 2006년 684건, 2007년 580건, 2008년 801건 등에 비해 급증했다. 이 같은 경찰의 각종 비리에 대해 시민단체나 경찰행정 전문가들은 감찰기능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경찰의 자정활동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있다(조선일보, 2010. 5. 11).

201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서울경찰청 소속 징계처분된 경찰관의 금품수수액수는 4억9천280만원에 달하며, 이는 2008년 보다 무려 1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도덕적 불감증이 경찰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경찰비리가 심각해 국민은 도둑에게 집을 맡긴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조선일보, 2010. 10. 11).

경찰조직의 내부통제의 미흡은 공권력을 바탕으로 하는 치안유지를 주임무로 하고 있는 경찰조직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경찰기강의 해이를 초래함은 물론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소위 ‘불신경찰’ ‘비리경찰’로 낙인찍힐 수 있다. 경찰은 창설이후 현재까지 경찰 내부통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각종 통제전략이 미흡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각종 대책들을 양산한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사후약방문’식의 대책들을 내놓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은 비리가 터져 나오거나 총수가 바뀔 때면 으레 ‘자정개혁’을 외친다. 그런데도 비리가 줄어드는 등의 개선조짐은 없다. 말로만 하는 개혁은 더 이상 안된다. 지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경찰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없다(연합뉴스, 2011. 1. 6).

경찰조직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청렴도가 낮기 때문이다. 결국 청렴도 낮다는 것은 경찰 내부통제의 미흡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찰관의 행동자제를 규율할 수 있는 통제기반에서도 내부통제가 미약해서 경찰관 개개인이 자의적이고도 이기적으로 행동하고자 할 때에도 제대로 규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부패 통제를 위한 내부 노력들이 부패통제의 큰 흐름을 바꿔놓을 정도의 커다란 성과는 없었으나 경찰조직 주도의 부패통제 분위기를 형성하고 경찰관들의 자정의지를 불러 일으키는 효과는 있었다(정재운, 2008: 48).

경찰내부의 관리체도가 잘만 작동된다면 경찰조직이 제대로 민주적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김상균, 2009: 27).

본 연구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1945년 10월 경찰 창설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그동안 경찰조직에서 실시했던 내부통제를 시대적으로 고찰한 뒤 이를 토대로 경찰 내부통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경찰 내부통제의 시대적 변천이라는 주제에 따라 경찰윤리와 경찰부패 그리고 청렴도 등의 시대적 변천을 포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I. 경찰 내부통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

경찰 내부통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크게 경찰통제를 비롯 경찰윤리와 경찰 청렴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경찰통제

(1) 의의

경찰통제란 경찰의 조직과 활동을 체크함으로써 경찰조직과 경찰활동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는 활동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경찰대학, 2004: 227). 즉, 경찰통제란 경찰의 조직과 활동을 점검하고 감시함으로써 경찰조직과 경찰활동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는 활동을 말한다. 곧 책임확보 보장 수단이다(배철효외, 2007: 655).

(2) 필요성

경찰업무는 성격 자체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고 하는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개입하는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기능으로 인해 권력으로부터 유혹을 받기 쉬우므로 경찰의 조직과 활동을 체크하고 감시함으로써 그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통제가 필요하다(곽영길외, 2008: 311). 즉,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확보, 법치주의의 확립, 국민의 인권보호, 조직의 부패방지와 건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3) 내부통제

1) 의의

경찰에 대한 내부통제란 경찰조직 내의 통제¹⁾를 의미하며, 외부적 통제는 경찰조직 외의 통제를 말한다. 통제는 조직 자체가 자기통제를 위주로 자기정화하고 자기의 정책을 법과 국민의 뜻에 맞게 고쳐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조직의 내부에서는 그 조직의 문제점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외부통제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배철효외, 2007: 664).

2) 감사관 및 청문감사관 제도

경찰청에는 감사관²⁾, 지방경찰청에는 시·도별로 감사담당관을 두고, 경찰기관에 대한 감사·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와 사정업무·경찰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 사항 조사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배철효외, 2007: 665).

청문감사관제도란 경찰서의 감찰·감사업무를 담당하며, 민원인의 고충 등을 상담·해소해 주고 경찰서 내의 인권보호상황을 확인·점검하는 기능을 한다. 청문감사관제도는 경찰의 국민 신뢰제고를 위한 취지에서 1999년 신설되었다(곽영길외, 2008: 315).

2. 경찰윤리

(1) 의의

윤리(ethics)의 본래적 기능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지켜야 할 행위의 규범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외적 준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결국 윤리란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에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해야 할 바를 지시하는 것이다(경찰대학, 2000: 3-4).

윤리의 개념에 대한 관점은 절대적 윤리설과 상대적 윤리설로 구분된다. 절대적 윤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선형적 규범으로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보편적 타당성을 갖는 가치라고 한다면 상대적 윤리는 인간생활의 규범인 윤리를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생활을 통해 형성되어 온 역사적인 산물로

1) 경찰통제의 유형에는 민주적 통제와 사법통제, 사전통제와 사후통제, 내부적 통제와 외부적 통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지난 2009년 12월 27일 경찰청, 첫 개방직 감사관에 김일태(53세) 前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 1과장이 임용되었다(http://www.police.go.kr/main/index_info.do/ 2011년 1월 13일 검색)

파악한다(Cooper, 1990: 8).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정책임과 윤리는 행정가치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이 지켜야 할 의무라고 본다. 문제는 행정이라는 것이 가치지향적인 면 보다는 가치배제적인 사실행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행정윤리의 정립이나 제고를 쉽게 논의하기가 힘들다고 본다. 그러나 행정인이 국민의 대리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윤리적 책임과 의무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김택, 2010: 55).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이다. 21세기 사회에서 높아진 국민수준과 많아진 對경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경찰조직은 어느 때 보다는 경찰윤리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으며, 경찰관에게는 일반국민보다 한단계 높은 행동윤리를 요구받게 된다(이상원, 2008: 143).

경찰윤리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들마다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다.

경찰윤리란 “경찰관이 따라야 할 하나의 직업윤리로 규정할 수 있다. 즉 경찰윤리란 경찰의 목표 및 역할에 관련된 모든 행동에 준거해야 할 당위적인 행위규범으로서 경찰인이 행하여야 할 바를 적극적으로 규정하거나 또는 행하지 말아야 할 바를 규정한 일종의 행위규범을 의미한다”(신현기, 2010: 298). 경찰윤리는 “경찰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행위규범을 의미하며, 따라서 경찰윤리는 경찰조직의 구성원들이 공·사생활에 준거해야 할 당위적인 행위규범으로서 경찰인이 행하여야 할 바를 적극적으로 규정하거나, 행하지 말아야 할 바를 규정한 행위규범이다”(조철옥, 2008: 125).

이상의 개념을 종합해 볼 때 경찰윤리란 “소극적 의미에서의 윤리관인 청렴성과 합법성, 민주성, 공정성과 가혹행위의 금지, 적극적 의미의 윤리관인 봉사성을 비롯 함목적성과 합리성 및 책임성과 권한남용의 금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윤리관인 능률성과 효과성을 구비한 직업윤리관을 의미한다”고 광의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필요성

경찰조직은 경찰관들이 실무에서 항상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들을 경시하기 쉽기 때문에 신규채용자나 현직경찰관들에 대한 윤리교육을 소홀히 하게 된다(이미정, 2006: 170).

경찰윤리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찰의 강제력과 재량권 행사이다. 경찰은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고 그 사용에 있어서도 큰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심지어 상황에 따라서는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Harrison, 1999: 1). 특히 경찰관은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신현기, 2010: 302).

둘째, 경찰활동의 외적 윤리기준이 된다. 시민들은 “경찰은 깨끗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등 자신들의 경찰에 대한 바램을 일상생활 속에서 표현하고 있다. 이는 경찰

이 지향해야 할 덕목이다(경찰대학, 2000: 12-13).

셋째, 비권력적 작용과 사회봉사의 증가³⁾이다. 경찰작용은 권력작용과 비권력적 작용으로 나누어 진다. 비권력적 작용은 봉사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민주주의가 성숙된 오늘날 경찰의 비권력적 활동영역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비권력적 작용은 봉사정신과 위험감수 정신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경찰윤리가 중요하다(조철옥, 2008: 126).

넷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책임이다. 경찰관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상황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경우에 처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보통 시민들은 한 겨울에 취객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경우 대부분 무시하고 지나간다. 하지만 경찰관은 동사할지도 모르는 취객을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시키거나 또는 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 보호소에 인계해야 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신현기, 2010: 304).

다섯째, 외부의 유혹극복이다. 경찰은 범법자를 단속하고 수사하며, 범인성 유해업소를 단속하고 처벌한다. 이러한 경찰의 단속은 그 대상의 입장에서 본다면, 경제적으로 손실이며 하나의 고통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경찰에게 보달라는, 눈감아달라는 유혹의 손길⁴⁾을 뻗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경찰도 한 사람의 인간이기에 이러한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선은 결과적인 쾌락 그 자체가 아니라 과정상의 윤리적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조철옥, 2008: 127).

3. 경찰 청렴도

(1) 의의

청렴성은 반부패, 투명성, 책임성의 개념을 포함하나 각각의 개념이 필요충분조건과의 관계는 아니다. 부패하면 청렴하지 못한 것 이지만 청렴하지 않다는 것이 곧 부패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청렴성은 부패관련 법규준수에 더하여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역할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즉, 청렴성은 부패(반부패)와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의 포괄적인 영역으로 볼 수 있다(박순애·박재현, 2009: 12).

청렴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한 학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청렴도를 국민(민원)의 입장에서 “공무원이 부패행위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의미한다.

3) 현재 경찰의 패러다임이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ary policing)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찰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올바른 경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선결과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경찰윤리의 필요성은 더욱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이러한 유형은 대부분 불법 오락실 단속과 성매매 업소 단속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해 이 같은 비리를 차단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땀질식 처방’이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경찰 청렴도에 대한 개념에 대해 몇몇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경찰 청렴도를 “경찰공무원 및 경찰조직이 직무 내·외적으로 국가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도덕적 기준인 공직윤리를 지키고,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자세 및 의지정도”라고 정의했다(김용근, 2007: 137). 경찰 청렴도란 “경찰공무원들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직무외적으로도 공권력을 집행하는 국가공무원에게 보편적으로 기대되는 보편적 기준의 준수정도”라고 규정했다(박종구, 2003: 138). 경찰 청렴도란 “경찰관들이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인 규범과 행동을 말한다”고 정의했다(이상열·신현기, 2008: 92-93).

이상의 개념들을 종합해 볼 때 경찰 청렴도란 “경찰공무원들의 직무 내·외적인 부분에 대하여 준수해야 될 규범 및 윤리수준의 체감현상”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실태

경찰 청렴도 실태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국정감사 자료로써 경찰청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문학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고찰하고자 한다.

1) 계급별 징계 현황

다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경찰공무원 계급별 징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는 경사가 60.9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위 29.2%, 경장 14.1%, 경감·순경이 4.1%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최근 3년간 경찰관 징계 계급별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계	총경 이상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2008년	801	5	18	37	201	387	117	36
2009년	1169	6	32	44	384	511	155	37
2010년 8월	818	6	12	34	231	372	122	41
계	2788	17	62	115	816	1270	394	114

자료 : 문학진의원 홈페이지. <http://www.m21.or.kr/Home/> 2011년 1월 10일 검색. 재정리.

2) 조치별 징계 현황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치별 징계 현황은 견책이 308명으로 전체의 46.9%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감봉이 574명으로 20.6%, 정직이 496명으로 17.5%, 해임이 374명으로 13.4%, 파면이 304명으로 10.9%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최근 3년간 경찰관 징계 조치별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2008년	801	67	127	165	168	274
2009년	1169	150	174	209	237	397
2010년 8월	818	87	73	122	169	637
계	2788	304	374	496	574	1308

자료 : 문학진의원 홈페이지. <http://www.m21.or.kr/Home/> 2011년 1월 10일 검색. 재정리.

3) 유형별 징계 현황

다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형별 징계 현황은 규율위반이 1,149명으로 전체의 4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품위손상이 604명으로 21.7%, 직무태만이 493명으로 17.7%, 금품수수가 318명으로 11.4%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최근 3년간 경찰관 징계 조치별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계	금품수수	부당처리	직무태만	품위손상	규율위반
2008년	801	72	8	251	140	330
2009년	1169	178	12	236	282	461
2010년 8월	818	68	4	206	182	358
계	2788	318	24	493	604	1149

자료 : 문학진의원 홈페이지. <http://www.m21.or.kr/Home/> 2011년 1월 10일 검색. 재정리.

III. 경찰 내부통제의 시대적 변천과정

본 연구에서는 경찰조직의 내부통제에 대한 시대적 변천과정을 경찰 창설부터 치안국 시대, 치안본부 시대, 경찰청 시대(Ⅰ), 경찰청 시대(Ⅱ)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경찰창설 ~ 치안국 시대

이 당시의 경찰은 우리나라의 건국을 다지는 초석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지만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일본 식민지경찰상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군정기구내에 경무국이 창설되면서 초대 경무국장에 조병옥박사가 임명되었다. 초대 경무국장에 취임한 조병옥 박사가 취임하면서 “경찰직원들에게 고함”이라는 지시문 6개 항목⁵⁾을 통하여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함을 강조할 즈음, 경무국에서

는 경찰의 이념과 행동지침으로서 ‘봉사와 질서’를 채택하여 전국의 경찰관서 정문에 게시토록 지시하였다(조성호, 2003: 19-20).

치안국 시대인 1955년 2월에는 교통경찰관들이 택시나 화물차의 운전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불만이 폭증하자, 이 같은 비리를 막기 위해 전국 교통경찰관의 동원급식비를 매일 세 끼씩 지급하는 조치를 취했다. 1956년 6월 12일에는 전국 주요 도로상에 설치된 약 100개의 검문소를 폐지했는데, 이는 일부 검문소에서 통행 차량에 대해 세금 아닌 세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이상열, 2003: 49).

제3공화국 수립이후 조국의 근대화라는 국가목표 아래 경찰 역시 또 한번 변신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봉사경찰 내지는 보호경찰로서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였다. 1966년 7월에 제정된 ‘경찰윤리헌장’은 경찰의 자율성과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정신 등을 제시하여 민주경찰의 발판이 되게 하였으며 이 헌장이 추구하는 이념 내지 덕목은 훗날 ‘경찰헌장’의 핵심적 이념의 토대가 되었다(조성호, 2003: 21).

1969년에는 감찰활동의 일환으로 징계규정에 의한 징계 이전의 행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계고장 발부제도’를 활용하는 한편 경찰의 오랜 민원을 일소하고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수사·교통·보안부서⁶⁾의 장기 근속자를 단계적으로 교체했다(이상열, 2003: 50).

이 시기의 경찰 내부통제는 다음 〈표 4〉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4〉 경찰창설 ~ 치안국 시대 경찰 내부통제

제 도 명	내 용	시 기
지시문 (경찰직원들에 고함)	경무국에서는 경찰의 이념과 행동지침으로서 「봉사와 질서」를 채택하여 전국의 경찰관서 정문에 게시토록 지시	1945년
동원급식비 지급	교통경찰관들이 택시나 화물차의 운전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불만이 폭증하자 이 같은 비리를 막기 위해 전국 교통경찰관의 동원급식비를 매일 세 끼씩 지급하는 조치	1955년
검문소 폐지	일부 검문소에서 통행 차량에 대해 세금 아닌 세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주요 도로상에 설치된 약 100개의 검문소를 폐지	1956년
경찰윤리헌장 제정	경찰내부적인 자기교정과 정신적인 재무장 강조	1966년
계고장 발부	징계규정에 의한 징계 이전의 행위자의 주의를 환기	1969년
장기근속자 단계적 교체	경찰의 오랜 민원을 일소하고 기강확립을 위해 수사·교통·보안부서의 장기근속자를 단계적으로 교체	1969년

- 5) 이 지시문은 ①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경찰 ②냉정하여야 할 경찰 ③공평하여야 할 경찰 ④검소하여야 할 경찰 ⑤일상에 수양하여야 할 경찰 ⑥내외정세의 사명을 알아야 할 경찰 등 6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신은 그 뒤 경찰윤리헌장이나 경찰헌장 등에 면면히 이어지게 된다(조성호, 2003: 19).
- 6) 이 시기의 보안부서란 현재의 보안부서가 아닌 방법부서 즉, 현재의 생활안전부서를 의미한다.

2. 치안본부 시대

1975년에는 고정배치로 부조리의 원인이 되어 온 교통초소를 폐지하고 윤번근무제로 근무시간을 전환하고 월정금 수급 및 면허증 보관행위를 폐지하였다. 교통외근감독관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존재하던 수석제도도 공과금 할당 등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폐지하였다. 1976년 10월 유신과 더불어 경찰도 유신경찰상 구현을 위해 부패 경찰관을 숙정하는 경찰자체의 정풍운동을 2회 실시해 1차에서는 1,013명, 2차에서는 445명 등 총 1,458명을 숙정하는 조치를 단행했다(이상열, 2003: 50).

제5공화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의사회구현과 민주복지국가의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 사회기강확립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 그 결과 경찰관의 자질향상과 대민봉사 자세를 통한 새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새경찰신조’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1980년에 경찰의 실천윤리강령으로서 새경찰신조⁷⁾가 제정되었다(조성호, 2003: 26).

1982년 경찰 복무기강 재확립의 필요성과 경찰부적격자에 대한 ‘직권면직제’를 실시하는 한편 감독권 불이행자는 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여 징계벌을 강화하였다. 또한 1983년 6월 경찰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하여 경찰공무원의 정신적 지표가 될 경찰사명, 경찰정신 등을 기본강령으로 명문화하고 복무자세와 복무준칙 및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다(조성호, 2003: 26-27).

1988년에는 그동안 존재해 오던 위민실을 민원실로 확대·개편함과 동시에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관리쇄신방안을 마련했다.

1990년 3월 28일 대통령의 ‘공직자 새정신운동 추진지시’에 의해 정직, 절제, 봉사를 경찰의 새정신운동의 이념으로 삼아서 실천한 적도 있다(조성호, 2003: 27).

이 시기의 경찰 내부통제는 다음 <표 5>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7) 새경찰신조의 내용은 “우리는 새시대의 사명을 완수한다”, “우리는 깨끗하고 친절하게 봉사한다”, “우리는 공정과 소신으로 일한다”,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한다” 등 4개항이다.

〈표 5〉 치안본부 시대 경찰 내부통제

제 도 명	내 용	시 기
교통초소 폐지	고정배치로 부조리의 원인이 되어온 교통초소를 폐지하고 운번근무제로 근무시간을 전환하고 월정금 수금 및 면허증 보관행위를 폐지	1975년
수석제도 폐지	교통외근감독관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존재하던 수석제도도 공과금 할당 등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폐지	1975년
정품운동 전개	유신경찰상 구현을 위해 2회에 걸쳐 부패경찰관 숙정단행	1976년
새경찰신조 제정	경찰관의 자질향상과 대민봉사 자세를 통한 새시대에 부응	1980년
직권면직제 신설	경찰 복무기강 재확립의 필요성과 경찰부적격자에 대한 직권면직제를 실시하는 한편 감독권 불이행자는 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여 징계벌을 강화	1982년
경찰공무원복무규정 개정	경찰공무원의 정신적 지표가 될 경찰사명, 경찰정신 등을 기본강령으로 명문화하고 복무자세와 복무준칙 및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규정 마련	1983년
민원실 확대·개편	그동안 존재해 오던 위민실을 민원실로 확대·개편	1988년
공직자 새정신운동 추진지시	정직, 절제, 봉사를 경찰의 새정신운동의 이념으로 삼아서 실천	1990년

3. 경찰청 시대(Ⅰ)

경찰청 시대(Ⅰ)의 시간적 범위는 1991년 8월 1일 경찰청 개청 이후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경찰청 시대가 시작되면서 경찰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민주경찰로 거듭나고자 ‘경찰헌장’⁸⁾을 제정하였고 이로써 경찰의 확고한 정신적 지표가 확립되게 되었다(조성호, 2003: 28).

1993년 2월에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참된 민본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경찰문화를 창출함은 물론 조직 내외의 비능률적 파행적인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등 새로운 경찰상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행정쇄신기획단’을 운영했다. 이러한 경찰행정쇄신기획단에서는 조직의 안정과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인사에 있어 심사승진의 경우 복수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2만여명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 실무능력 배양은 물론 자발

8) 경찰헌장은 민주경찰의 당위성과 본분을 제시하고 나아가 2000년대 경찰의 이념적 방향인 봉사정신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서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 등 5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적인 의식과 행태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했다.

1995년 5월에는 고물영업법을 폐지하여 허가제였던 고물영업을 자유업으로 전환하였다. 1995년 7월에는 경찰 3대 부조리 부서의 하나로 오명을 쓰고 있던 교통경찰의 부조리 척결과 면모를 일신하고자 ‘교통경찰관 인사운영 요강’을 개정하여 교통부조리로 인한 징계처분자는 교통경찰 심사 선발 대상에서 배제토록했다.

경찰청은 특히 1999년 6월 일체의 사건사고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불친절이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예방과 색출을 위해 ‘청문감사관제’를 도입해 현재 운영중에 있다(이상열, 2003: 51).

1999년 고질적인 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통해 비리행위자를 도태시키는 한편 전국 경찰관서에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 부조리신고센터에서는 경찰관으로부터 부당한 사건처리 등 억울한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직접 경찰관서장과 연결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경찰청, 2006: 318).

이 시기의 경찰 내부통제는 다음 〈표 6〉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6〉 경찰청 시대(Ⅰ) 경찰 내부통제

제 도 명	내 용	시 기
경찰헌장 제정	경찰청 개청과 더불어 신뢰받는 국민의 경찰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 마련.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 천명	1991년
경찰행정쇄신 기획단 운영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2만여명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 실무능력 배양은 물론 자발적인 의식과 행태의 변화를 유도	1993년
고물영업법 폐지	허가제였던 고물영업을 자유업으로 전환	1995년
교통경찰관 인사운영 요강	경찰 3대 부조리 부서의 하나로 오명을 쓰고 있던 교통경찰의 부조리 척결과 면모를 일신하고자 교통부조리로 인한 징계처분자는 교통경찰 심사 선발 대상에서 배제	1995년
청문감사관제 도입	일체의 사건사고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불친절이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예방과 색출	1999년
부조리신고센터 설치	경찰관으로부터 부당한 사건처리 등 억울한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직접 경찰관서장과 연결하여 해결	1999년

4. 경찰청 시대(Ⅱ)

경찰청 시대(Ⅱ)의 시간적 범위는 2000년 부터 2010년 까지로 한정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경찰은 부정부패 추방운동의 일환으로 2000년 4월 전국 경찰관서에 ‘포돌이 양심방’⁹⁾을 설치·운영하는 등 깨끗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2001년 12월 10일부터는 깨끗하고 공정한 경찰상을 정립하기 위해 사건조사자가 청탁을 배제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껏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건청탁 안하고 안받기 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2002년에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不친절·不공정·不성실’ 등 ‘3不 추방운동’을 전개했다(경찰청, 2006: 318-319).

경찰청은 2003년 4월 25일 교육부에 이어 두 번째로 일선 경찰관의 청렴유지를 위한 24개 항의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행동강령에는 경찰관은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해 상급자의 지시가 법에 맞지 않을 때는 물론이고 형평성이나 사회통념을 깨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찰청은 그동안 고질적인 관행으로 여겨져 오면서 일부 경찰서에서 자행되어 사회문제화 되었던 경리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2003년 5월 11일부터 경찰청에서 발주하는 입찰(계약)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청렴이행 계약서’¹⁰⁾를 받는 등 ‘청렴계약 이행제’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다(이상열, 2003: 53).

이와 함께 2004년 3월 15일부터 실무자 중심의 자율적인 정화운동 전개로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및 조직내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2004년 3월 15일부터 사이버경찰청 경찰관 전용방 내 ‘자정코너’¹¹⁾를 개설·운영하여 일선 경찰관들의 여론 수집 및 반영으로 변화에 적극 부응하는 新감찰상을 정립하였다. 2005년 반부패 청렴시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담 T/F인 ‘경찰청 청렴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선까지 확대하는 등 반부패 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경찰청, 2006: 322).

경찰청은 기존의 통제 위주의 감찰·감사만으로는 직원들의 비위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2007년 10월 5일 경찰공무원의 공·사 애로사항을 민간인 상담전문가를 통해 해결하고자 ‘경찰관 고충 상담관계’를 도입·운영하였다(남형수,

9) ‘포돌이 양심방’은 경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부득이 금품을 받았으나 반환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이를 청문감사관실에서 신고받아 제공자에게 우편으로 반환하거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유실물법에 의거 습득물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주요 내용은 ①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관계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등이다.

11) 자정운동의 주요 실천내용으로는 대다수 경찰관의 사기를 꺾는 일부 잔존 부조리 해소,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성실근무 다짐, 현장 인권개선을 위한 적법절차 준수, 기타 부적절한 행태·제도개선 등이다(경찰청, 2006: 321).

2009: 41).

한편 2007년 ‘해피콜 제도’를 도입해 전국 경찰관서에서는 주요 민원업무를 취급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통해 민원만족도와 담당 경찰관의 청렴성 여부를 조사하고 불만요인을 취합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경찰청, 2008: 383).

2008년에는 경찰관 인적쇄신을 위해 채용시부터 재직시까지 인사관리 전반에 걸친 ‘부적격자 인적쇄신 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 부적격자 심사를 강화하고 부적격 경찰관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한 개개인의 자율적 의식개혁을 유도하는 등 경찰관 비리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와 더불어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비위를 예방하고 유착비리 근절을 위해 ‘공직기강 특별감찰반’을 편성하여 부패 취약관서·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발굴·개선하였다(경찰청, 2009: 372).

2009년에는 징계 전력 누적자·사고요인 잠재자 등 ‘재직 부적격자’를 대상으로 ‘자기개발 향상과정’¹²⁾을 운영하고 개선교육 이후에도 대상자에 대한 감독자 면담 등의 집중관리를 실시하였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감찰활동의 방향을 복무관리에서 비리 사정체제로 전환하고 비리 내사 전담팀 173명(경찰청 21명, 지방경찰청 152명)을 편성·운영하였다(경찰청, 2010: 423).

경찰청은 2010년 5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직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정활동을 전개하여 부적격자들을 과감히 퇴출하고 체계적인 인적관리로 비위발생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아울러 경찰청 감사관은 개방직으로 전환하고, 경찰서 감찰인력을 지방청으로 이양하여 비위감찰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상시학습제도’를 도입하여 일정기간 공직윤리교육 이수율 의무화하고 파출소장 등 중간관리자에게 실질적인 감독권한을 부여하여 근태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서장 평가에 소속직원의 비위 여부를 반영함으로써 지휘, 감독자의 관리책임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2010년 12월 23일 서울 등 일부 지방청에서 시행중에 있는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제¹³⁾가 부패 유착고리를 차단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12월 27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다.

이 시기의 경찰 내부통제는 다음 <표 7>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2) 자기개발 향상과정 수료자는 2009년 1차~4차에 걸쳐 135명이 교육 후 현장으로 복귀하였다. 계급별로는 경정 3명, 경감 2명, 경위 35명, 경사 63명, 경장 26명, 순경 6명 등이다.

13)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제란 현행 규정상 불법이거나 불법의 소지가 있어 지도·단속이 필요한 사행성 게임장, 성매매·유흥업소, 불법 대부업 등 경찰대상 업소 운영자, 종사자 및 연관되어 있는 조직폭력배 등 일체의 관련자와 경찰관들과의 업무 외적인 전화통화(문자메세지 포함), 사적만남, 회식, 금전거래 등 부적절한 접촉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이다.

〈표 7〉 경찰청 시대(Ⅱ) 경찰 내부통제

제 도 명	내 용	시 기
포돌이 양심방	경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부득이 금품을 받았으나 반환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이를 신고받아 제공자에게 우편으로 반환하거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유실물법에 의거, 습득물로 처리하는 제도	2000년
사건청탁 안하고 안받기 운동	깨끗하고 공정한 경찰상을 정립하기 위해 사건조사자가 청탁을 배제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껏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	2001년
3不 추방운동	국민에게 봉사하는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부친절·부공정·부성실 등을 추방	2002년
청렴유지 행동강령	경찰관은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해 상급자의 지시가 법에 맞지 않을 때는 물론이고 형평성이나 사회통념을 깨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거부할 수 있도록 조치	2003년
청렴계약 이행제	경리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발주하는 입찰(계약)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청렴이행 계약서’를 받는 제도	2003년
자정코너 개설	실무자 중심의 자율적인 정화운동 전개로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및 조직내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사이버경찰청 경찰관 전용방 내 자정코너를 개설·운영하여 일선 경찰관들의 여론 수집 및 반영	2004년
경찰청 청렴위원회 구성	반부패 청렴시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담 T/F인 경찰청 청렴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선까지 확대하는 등 반부패 추진체계를 정비	2005년
경찰관 고충상담관제	경찰공무원의 공·사 애로사항을 민간인 상담전문가를 통해 해결	2007년
해피콜 제도	주요 민원업무를 취급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통해 민원만족도와 담당 경찰관의 청렴성 여부를 조사하고 불만요인을 취합하여 제도개선에 반영	2007년
부적격자 인적쇄신 방안	단계별 부적격자 심사를 강화하고 부적격 경찰관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한 개개인의 자율적 의식개혁을 유도	2008년
자기개발 향상과정	징계 전력 누적자·사고요인 잠재자 등 ‘재직 부적격자’를 대상으로 개선교육 이후에도 대상자에 대한 감독자 면담 등의 집중관리	2009년
상시학습제도	일정기간 공직윤리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파출소장 등 중간관리자에게 실질적인 감독권한을 부여하여 근태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서장 평가에 소속직원의 비위 여부를 반영함으로써 지휘, 감독자의 관리책임을 엄격히 적용	2010년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제	대상업소 관계자와 경찰관들과의 업무 외적인 통화(문자메세지 포함)와 부적절한 접촉행위 금지	2010년

IV. 결론 및 제언

1945년 경찰 창설 이래 경찰조직은 부패적결과 윤리의식 함양 그리고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각종 대책을 양산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찰의 기강확립을 위한 내부통제방안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실천 의지와 전략이 부실할 때는 그 효용가치가 저하될 수 밖에 없다. 한 사람의 인간도 스스로 아무리 양심적이고 절제력이 우수하다고 하여 항상 양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없다. 적절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김상균, 2009: 26).

이상에서 고찰한 경찰 내부통제의 시대적 변천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찰 창설부터 치안국 시대의 경찰관 부정부패는 대부분 부족한 보수와 일선 경찰관의 부족한 생활비에서 그 발생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경비부족은 일선 경찰서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할 정도였는데 문제는 정부예산부족도 원인이 있지만 이는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경비와 생활비용을 마련할 기회가 많은 것을 고려해 예산을 제대로 배정해 주지 않은 정부측에 문제가 있다. 즉, 정부가 제도적으로 경찰부패를 방조 내지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찰의 내부통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치안본부 시대의 경찰의 내부통제 활동은 적발 징계위주 보다는 지도계몽에 치중하여 부패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노력하고 이미 적발된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주의로 엄중 징계하려고 노력했지만 경찰 전 분야에 걸친 내부통제 활동은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이상열, 2003: 49-50).

경찰청 시대(Ⅰ) 시기에 있어서 내부통제 활동의 특징은 경찰인사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찰행정채신기획단을 설치·운영했으며, 교통경찰관 인사요강을 제정하는 등 인사비리에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경찰의 단속과 규제를 완화하거나 타 부처로 이관하는 조치를 단행했으며, 기존의 감찰·민원부서를 확대·개편하여 청문감사관제도를 도입한 점을 들 수 있다.

경찰청 시대(Ⅱ) 시기에 있어서 경찰 내부통제의 특징은 기존의 통제방법에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의 부패를 척결하고자 과감한 인적채신에 중점을 두었으며, 아울러 경찰조직 전체보다는 경찰관 개개인의 자정의식 함양을 위주로 전개되어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본 연구는 경찰 내부통제의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종합적인 내부통제제도의 정책 시행이다. 경찰의 청렴도 문제는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 채용단계에서부터 교육훈련, 승진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제도 및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감찰경과제'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감찰활동의 강화이다. 현재 감찰인력은 1,457명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한 실정이며, 더욱이 감찰요원들의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감찰활동 결과에 불만과 이의를 제기하는 경찰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감찰인력의 대폭적인 증원과 감찰요원 전문화 즉, 감찰경과제¹⁴⁾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감찰경과제가 도입될 경우 대다수의 경찰관들은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감찰결과에 대체적으로 수긍함은 물론 나아가 경찰조직 전체에 대해 신뢰감을 가지게 됨은 자명한 이치이다.

셋째, 부적격자에 대한 과감한 인적쇄신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공직기강 특별감찰반을 상시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아울러 윤리교육을 비롯한 각종 직무교육의 내실화 등 ‘상시학습제도’의 활성화로 비리대상자나 부적격자에 대한 과감한 인적쇄신이 요구된다.

넷째, 내부고발자 특진제도의 도입이다. 상관의 위법한 지시나 압력, 청탁 등 주요 비리 제보시 경감까지 특진시키고 희망지로 전보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부고발자 특진제도의 활성화 즉, 법제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스폰서문화의 일소이다. 아직까지 경찰내부에 잔존해 있는 스폰서문화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감찰활동을 상시 감찰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아울러 기존의 잘못된 인사관행 즉, 학연과 혈연, 지연 등을 기초로 하는 정실주의 문화가 아닌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여섯째, 청문감사관제도의 내실화이다. 경찰 내부에서조차도 일선 경찰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문감사관제도에 대해 경찰인력의 낭비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도 시행된 지 11년이 경과된 청문감사관제도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경찰홍보의 부족에 기인한 결과이며, 향후 청문감사관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강화하여 경찰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받는 경찰상 정립에 기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업무의 특수성에 맞는 현실성있는 보수체계,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타 부처와 동등한 수당의 현실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부족한 경찰인력을 신속히 증원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이 일정부분 충족되었을 경우 경찰관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할 것이며, 이는 결국 경찰조직 전체의 청렴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것이다.

14) 감찰경과제이란 감찰·감사부서에 근무하는 인력에게 일반경찰관과는 별도의 경과를 부여하고, 독립된 인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자체 감찰·감사요원의 임용, 승진, 전보, 해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기준을 타 경찰과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우락, 2002: 68).

<참고문헌>

- 경찰대학 (2000). 「경찰윤리」. 3-13.
- 경찰대학 (2004). 「경찰학개론」. 227.
- 경찰청 (2010). 「경찰백서」. 423.
- 경찰청 (2009). 「경찰백서」. 372.
- 경찰청 (2008). 「경찰백서」. 383.
- 경찰청 (2006). 「한국경찰사 V」. 318-322.
- 곽영길외 (2008). 「경찰학개론」. 311-315.
- 김상균 (2009). 경찰 기강해이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대안 모색. 「긴급토론회」. 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인권연대. 23-27.
- 김용근 (2007). 경찰 청렴도와 조직유효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37.
- 김우락 (2002). 경찰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8.
- 김택 (2010). 공무원 윤리의 책임과 가치, 윤리적 딜레마, 「한국부패학회보」, 제15권 제3호. 55.
- 남형수 (2009). 경찰공무원의 부패인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1.
- 박순애·박재현 (2009). 청렴성 개념과 측정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제14권 제1호.
- 박종구 (2003). 경찰 청렴도 제고방안, 「용역과제」, 치안정책연구소, 138.
- 배철효외 (2007). 「경찰학개론」. 대영문화사. 655-665.
- 연합뉴스. 2011년 1월 6일.
- 신현기. (2010). 「경찰학개론」. 21세기사. 298-304.
- 이미정 (2006). 경찰윤리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한국경찰학회보」, 제12호. 170.
- 이상수 (2010). 경찰 감사시스템의 한계와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부패학회보」, 제15권 제3호. 164.
- 이상열 (2003). 경찰부패의 영향요인과 통제전략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9-51.
- 이상열·신현기 (2008). 경찰청렴도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8권 제2호. 92-93.
- 이상원 (2008). 경찰관의 윤리성이 직무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0권 제2호. 143.
- 정재윤. (2008). 경찰부패 방지를 위한 외부통제기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8.
- 조선일보. 2010년 10월 11일. 5월 11일.
- 조성호 (2003). 경찰공무원의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28.

조철옥 (2008). 「경찰학개론」. 대영문화사. 125-127.

Harrison, Bob (1999). “Noble Cause Corruption and the Police Ethic” ,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Vol. 68 No. 8.

Cooper, Terry L (1990). *The Responsible Administrator* (3rd ed). San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 8.

경찰청 홈페이지 : http://www.police.go.kr/main/index_info.do/ 2011년 1월 13일 검색.

문학진 의원 홈페이지 : <http://www.m21.or.kr/Home/> 2011년 1월 10일 검색.

투고일자 : 2011.01.26

게재일자 : 2011.03.17